

전북도, 지자체 평가 '우수' 선정

전북투어패스·수요응답형버스·삼락농정거버넌스·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시책 우수사례 인정

전북도가 추진 중인 전북투어패스와 수요응답형버스, 삼락농정거버넌스,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시책 우수사례로 인정을 받았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된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정부3.0 추진실적 평가결과, 전국 시도 중 2위를 차지하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올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3.0 추진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전북도는 4개 평가항목, 8개 세부지표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도는 그동안 도민 행복을 위해 '정부3.0 국민체감 토크마당' 유치 등을 통한 정부3.0 성과를 확산하고, 공공

데이터의 민간이용 활성화와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등 정부혁신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도정에 접목해 실천하는데 노력해 왔다.

특히, 전북 특성을 잘 살린 '전북투어패스', '전북 콜버스' 등을 정부혁신 핵심가치와 연계해 전국적 서비스로 성장시켰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주요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국민 맞춤형 서비스 주요사례는 도와 시군, 민간이 협업해 전북도를 단일 관광권으로 묶은 관광객 맞춤형 관광서비스로 '전북투어패스' 한 장으로 전북관광 OK!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정부3.0 성공사례 확산 사례로는 버스 이용 수요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 소형승합차를 활용해 노선과 운행시

간을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전국 최초, '전북농·벽오지마을 수요응답형버스 성공사례'로 수요자 만족도도 높아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등 전국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주도하고 있다.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현안해결 사례로는 농민이 주도하는 협치 농정체계를 마련하고 전국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를 추진하는 등 농민 중심의 차별화된 '농민,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삼락농정 거버넌스'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하는 방식 개선분야 중 기관 간 협업행정 사례는 도, 시군, 경제계가 함께 '민관합동 기업환경 개선 협업체계'를 구축해 기업체감도를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유치' 사례가 적극행정 및 감사원 우수사례로 선정 되는 등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에도 앞장섰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정부3.0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 을 인센티브로 교부받게 되며, 정부포상과 함께 정부3.0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1년 동안 게시하게 된다.

또한, 도와 시군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정부3.0 업무추진으로 지난해에는 '전주시'만 우수기관에 선정됐는데 올해에는 전주시 포함인 익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각각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게 된다. /인재용 기자

김종희, 한국인물대상 '의정공로부문' 수상

국민의당 김제부안 김종희 의원은 민주신문사와 이십일세기뉴스가 선정한 올해의 '한국인물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고 밝혔다.

한국을 빛낸 올해의 한국인물대상 '의정공로부문' 수상자인 김 의원은 2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인물대상수여식 수상소감에서 "평생 한학자와 한의학자로 살면서 무료로 지역사회의 인재양성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오직 지역발전에 앞장서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감사 인사를 피력했다.

한편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한 21



세기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물대상'은 이십일세기뉴스그룹이 주최하며 매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언론 등 각계의 공로자를 선정하여 수상한다. 그동안 정치부문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세균 국회의장,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원희룡 제주지사,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도의회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촉구

교육부가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연기에 대해 도의회 의원들이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양용모·이해숙·정호영·정호윤 의원 등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연기와 국정·검정 혼용체제 도입 등은 국정화 다시 추진하려는 꼼수이자 잔꾀"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표 국정혼란 중 하나인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결국 '시행 1년 연기'라는 형태로 훗날 민심에 굴복했다"며 "국정교과서는 박근혜와 함께 탄핵대상이며 즉각 폐기돼야 하는 독재역사의 유물"이라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시대흐름과 국민의 민심을 역행하는 정책을 지속하려는 것에 대해 실망과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교과서를 집요하게 추



전북도의회 양용모·이해숙·정호영·정호윤 의원 등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연기와 국정·검정 혼용체제 도입 등은 국정화를 다시 추진하려는 꼼수이자 잔꾀"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진하며 교육정책을 난파선으로 만든 교육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정교과서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또 학교 교육과정에서 역

사왜곡 국정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의회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장성민 전 의원, 전주서 대권도전 시사

장성민 전 국회의원이 28일 전주를 방문해 차기 대권 도전 의지를 시사했다.

이날 장 전 의원은 전주 바울교회에서 열린 지역 종교계와 언론인 등 오피니언 리더와의 초청 포럼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차기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전 의원은 "정치는 잘못하면 주권을 상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위태롭게 한다"며 "현재 이 나라에는 책임지는 정치가 사라졌다"고

개탄했다.

이어 "기존 정치권들이 국가적 대제안을 막고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과 전략과 리더십이 없다면, 이런 낡고 썩은 정치판은 싹 거둬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새판을 짜야 한다"며 대권 도전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시대 정신으로 중도 통합과 실용을 통한 화해 상생과 부국강병의 국부 정치, 특권과 차별이 없는 공정한 신뢰사회, 창조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문화융성 등을 제시했다. /인재용 기자

도 국회의원, 특별교부금 추가 확보 안간힘

국회 유성업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은 28일 재난안전관련 국민안전처 특별교부금 7억6,000만 원을 확보했다.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정읍읍과 고창의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 예산으로 2억1,000만원, 고창 선운산 유스호스텔 내진보강 공사 예산 5억5,000만원 등이다.

김광수 국회의원도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9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김 의원은 예결위 활동이 끝난 12월에 도 행자부와 안전처에 끈질기게 교부세 배정을 요구해 한옥마을 문화시설 보강 5억원, 한벽교 내진보강 4억원 등 총 9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인재용 기자

또한 김종희 국회의원도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6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교부된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공공건물의 재난 안전의 보강 특히 지진에 대비한 내진보강사업과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에 특경해 교부됐다.

신당에 합류한 정운천 국회의도원 국민안전처로부터 '전주 월드컵경기장 긴급 보수·보강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국민안전처 특교세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환경 조성은 물론, 2017년 FIFA U-20 월드컵의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국가경제 활성화와 대외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인재용 기자

전북 건의 3건, 규제개혁 장관회의서 해결

청소년 수련원 일반인 숙박 미용업 영업장 공동 사용 일반음식점 내 휴게음식점·제과점 신고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에서 전북도가 건의한 청소년 수련원의 일반인 개별숙박과 미용업 영업장 공동 사용, 일반음식점 내 휴게음식점·제과

점 신고 등이 허용됐다.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민생 현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고, 경제부총리 등 관계 장관, 주요 경제 단체장, 지자체,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북도 최병관 기획관리실장과 부안군 이병일 청소년 수련원장 등은

행정부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완화 과제로 청소년수련원의 일반인 개별숙박 허용에 대해 건의했다.

부안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이 입소 없는 주말 및 방학기간에 일반인 예약문의가 쇄도함에,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에 한해 개별 숙박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어 청소년수련원은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에서는 청소년수련원도

개별 숙박 허용을 적극 건의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장은 "청소년활동 동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청소년수련원도 40% 이내에서 일반인의 개별 숙박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미용업 영업장 공동사용 허용, 일반음식점 내 휴게음식점 제과점 신고 허용 등도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사례로 건의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소상공인 현장 규제 개선을 위해 일반음식점 내 휴게음식점, 제과점 신고를 허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17 나눔캠페인 기부자
(김제시 교원들)
▲교동 휴먼시아 101~102동 270,500
▲교동 향교마을 주민 일동 355,000
▲교동 황인환씨 150,000
▲신월동 신월마을 주민 일동 620,000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